

## ■ 수계별 폐수배출기준 차등화

– 생태독성 이용 산업폐수관리제 도입 전망

그 동안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됐던 폐수배출허용기준이 업종, 처리기술 수준, 수계 목표수질 등에 따라 차등화되고, 효율적인 산업폐수관리를 위해 생태독성을 이용한 산업폐수관리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환경부 전병성 수질보전국장은 지난 7월 10일 울산시 경남은행 울산본부에서 국회환경포럼과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주최로 열린 “폐수처리시설 배출규제 실태와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단계별 추진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모든 폐수배출업소에 대해 획일적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업종별 폐수 특성과 처리기술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해당수계의 환경기준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확대하고, 신규시설과 기존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차별화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수질오염에 민감한 수계의 폐수배출시설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체계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해 17개 물질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일정기간의 모니터

링과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법제화할 예정이다.

한편 전 국장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 중 BOD, 부유물질, 총질소 및 총인 등 4개의 기준을 201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강화하고, 대장균군수의 방류수 기준도 2008년부터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 동안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됐던 폐수배출허용기준이 업종, 처리기술 수준, 수계 목표수질 등에 따라 차등화되고, 효율적인 산업폐수관리를 위해 생태독성을 이용한 산업폐수관리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

또한 생태계에 적합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독성물질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30여개 업종에 대해 향후 3년간 세부 생태독성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 적합한 공정시험방법, 생물독성 관리제도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국 산업폐수배출시설은 2002년 현재 약 5만1천여 개로 2001년에 비해 약 2천600여개 업소가 증가하고, 규모별로는 1종 업소가 전체의 0.6%인 반면 규모가 작은 5종 업소가

92.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전국에 4천381개소로 이중 63%가 출판·인쇄·사진시설이며, 수계별로는 한강 32.1%, 낙동강 20.5%, 동·서·남해에 24.5%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 수도권 100여개 공장 오염물질 배출 총량 규제

오는 2007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내에서 연료를 많이 쓰는 100여개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하는 사업장 총량제가 시행된다.

또 300개 가량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총량제 시행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연구용역 사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결정된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등 6개 부처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오는 2007년 7월부터 수도권 내의 1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총량제를 실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최근 밝혔다.

1종 사업장은 연료를 무연탄 열량 기준으로 환산해 1년에 1만 이상 사용하는 공장, 2종은 2천 1만, 3종은 1천 2천 사용하는 공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 김포, 고양, 남양주, 구리 등 경기도 내 15개 시에 위치한 100여개의 1종 사업장은 2007년 7월부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3가지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1종 사업장 중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환경부는 400여개에 달하는 1~3종 사업장을, 산자부는 1종 사업장만을 총량제 실시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해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장 총량제는 순차적 시행을 바탕으로 추진돼 왔다"며 "2007년 하반기부터 1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후 2~3년 내에 2, 3종 사업장도 시행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 POP스 제품 수출입 규제 전망

'04년 POP스 규제 스톡홀름협약 발효 예정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스)을 규제하는 스톡홀름협약이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생산, 사용, 수출입이 규제돼 국내 기업들도 이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POP스는 사람에게 암을 유발시키는가 하면 기형을 유발하고, 동물의 면역기능과 생식기능을 저하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조사 및 체계적인 관리도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국제연합(UN)은 지난 2001년 5월 스톡홀름협약을 채택하고 유기염소계 농약, 산업용 화학물질, 폐기물 소각 등으로 발생하는 알드린, 다염화비페닐(PCBs), 다이옥신 등 12종의 물질을 규제대상 물

질로 선정했다.

이 협약은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151개국에서 서명하고 현재 31개국 가입하고 있다.

협약이 발효되면 변압기와 축전기의 절연유로 사용되는 PCBs 등 제품의 생산, 사용, 수출입이 규제되며, 다이옥신 등 부산물로 발생하는 POP스도 최소화해야 한다.

또 POP스를 포함한 제품 및 폐기물을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



'04년 POP스 규제 스톡홀름협약 발효 예정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스)을 규제하는 스톡홀름협약이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생산, 사용, 수출입이 규제돼 국내 기업들도 이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지게 된다.

규제대상 물질은 알드린, 클로르단, DDT, 디엘드린, 엔드린, 헵타클로르, 미렉스, 톡싸펜, HCB, 다염화비페닐, 다이옥신, 퓨란 등 12종.

### 2003년도 청정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확정

산업자원부는 금년 3월에 수립 발표한 「청정생산 확산 중기 실천계획」에

따라 2003년도 청정기술개발사업에 대해 7개 지원과제를 확정하고 1차년도 정부지원금인 63억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 [해양오염 규제] 환경부·해수부 갈등

육지에서 바다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내용의 '육상기인 오염물질 해안배출관리법안'을 둘러싸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정장선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해안배출관리법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지난 6월 20일 국회에서 열렸으며 그 이후 양 부처 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나가는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해수부 장관이나 해안관리청이 바다로 직접 배출되는 하천의 수질기준을 설정해 오염물질을 관리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반입수수료 일일정산제 시행

지난 7월 1일부터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일일정산제로 시행됐다.

### 공급망환경관리사업자 첫 선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국내 처음으로 실시되는 공급망환경관리사업(SCE)의 첫번째

사업자로 현대자동차, 포스코, 유한킴벌리를 선정했다고 지난 6월 23일 발표했다.

이들 3사에 대해서는 2006년 5월까지 3년간 정부와 민간을 합쳐 60억여원의 자금이 지원되며 지원금은 이들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의 친환경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쓰여지게 된다.

이번 사업으로 친환경 생산시스템 구축 지원을 받는 업체는 현대차 공급업체 10개사, 포스코 공급업체 13개사, 유한킴벌리 공급업체 10개사 등 모두 33개사다.

공급망환경관리사업은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함께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도입 프로그램을 제시할 경우 정부가 사업비의 일부(50~7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앞으로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음식점 1회용품 사용 강력 규제

지난 7월 21일부터 스티로폼 도시락 용기 등 음식점의 1회용품 사용이 강력히 규제된다.

다만 분해성 대체용기를 사용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업체에 한해 7월말까지 용기를 주문제작해야 하는 업체의 경우 9월 중순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위반업소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습적인 위반업체나 대형업체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른 행정지도나 10만원 내외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또 분해성 대체용기 사용

“

지난 7월 21일부터 스티로폼 도시락 용기 등 음식점의 1회용품 사용이 강력히 규제된다. 다만 분해성 대체용기를 사용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업체에 한해 7월말까지 용기를 주문제작해야 하는 업체의 경우 9월 중순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

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를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하는 횃집, 매장면적이 33㎡ 이상이면서 1회용 봉투를 무상제공하는 약국과 서점,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 제공하는 체육 구단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 오염물질 사업장 4곳중 1곳 법규 위반

낙동강권역의 폐수배출업소 4곳중 1곳 이상은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낙동강권역 326곳의 폐수배출업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 결과, 이중 91개업체가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특히 지난 5월 20일부터 한달여간 물금·매리취수장의 상류지역인 김해시 진영읍 일대 112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에서 44개 업체가 적발되는 등 청정지역인 상수원 상류지역 업체들의 위반행위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이 16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5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곳, 기타 환경법규 위반이 76건이었다.

## 경기·인천 폐기물업소 법규위반율 15%

경인지방환경청은 올 상반기 관내 1천143개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15.1% 173개 업소가 법규를 위반했다고 지난 7월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위반율 3.8%에 비해 11.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지

난해 10월 이후 대기, 수질, 유독물에 대한 환경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위반유형별로는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114건, 처리계획변경 미이행 22건,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 기타 35건이다.

환경청은 이중 7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고 33개 업체를 고발했으며 나머지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환경법규 위반업체 협박 돈 뜯어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뜯은 혐의로 52살 이 모씨 등 지방지 기자 3명을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7월 김포시 모 업체로부터 폐기물 방치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260만원을 받는 등 2년여 동안 20여개 업체들로부터 3천5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김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2년여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천5백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 울산, 기업과 환경행정 파트너십 구축

울산시의 환경정책이 기업경영과 환경행정이 상생하는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울산시는 가족문화센터 대연회장에서 열린 168개 기업체 공장장 초청

“환경시책설명회”에서 국가산업단지 환경관리권 위임 이후 환경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기업체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울산시는 설명회에서 “지역통합관리를 위한 인프라구축을 위해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인 울산시 대기환경기준조례를 제정했으며 환경정책과 관리기능을 분리 전문화하는 등 환경행정 역량을 확대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악취 등 시민체감 환경 개선을 위해 석유화학계열사 하반

“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뜯은 혐의로 52살 이 모씨 등 지방지 기자 3명을 구속했다.

”

기 정기보수를 정례화 했으며 악취 등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상설환경순찰반 운영, 시민 악취모니터제 확대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체의 환경지원을 위해 기업체 환경마일리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체 환경투자 가이드라인 설정, 환경 홈닥터 활성화, 환경분야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폐기물 업체 20억원대 탈세 세무 공무원 뇌물 묵인

울산지역의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무자료 거래”를 통해 20억원대의 세금 탈세와 소각 가능한 폐기물의 불법 매립을 일삼다 검찰에 적발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안희권)는 지난 7월 3일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무자료 거래를 통해 60여억원의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H산업(주)(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대표 최모(73)씨를 세금탈루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총무이사 김모(56)씨 등 이사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 등은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립비를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 매출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등 1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의 김모(53) 전무이사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 3월까지 폐고무와 폐합성수지 등 소각 가능한 폐기물 5만7천여 t 을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로 구속됐다.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금리 인하 단행

- 7월1일부터 4.78%에서 4.08%로 대폭 인하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장(沈在坤)은 2003년 상반기 국내 외 경제불안 지속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재활용업체의 경영안정과 침체된 창업 및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고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대출금리를 7월 1일부터 연4.78%에서 연4.08%로 0.7% 인하한다고 밝혔다.

## ■ 수질 오염 측정기준 현실성 있게 바뀐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낙동강 수계 중 수질오염이 심한 정수장에 정수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수질차등지원제" 시행을 앞두고 부산 경남지역 정수장들이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6월 25일 철서, 물금 등 부산 경남지역 정수장들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내년부터 수질차등지원제 시행을 앞두고 수질오염 측정기준인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부영양화로 조류검출이 어렵고 기간도 5일이나 소요되는 등 현실성이 떨어져 화학적산소요구량(COD)으로 변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

수자원공사는 수질차등지원제를 도입, 낙동강 수질이 BOD 기준으로 월평균 3ppm 이상 올라가면 정수비용 과다로 수돗물 생산원가가 상승하는 점을 감안, 내년부터 3ppm 이상인 달의 원수요금 10%를 정수장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수자원측은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수질 측정기준은 BOD, 호수는 COD로 규정돼 있어 변경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 ■ 환경개선에 5년간 16조8천억원 투입

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중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현재 71 $\mu\text{g}/\text{m}^3$ 에서 2007년까지 선진국수준인 55 $\mu\text{g}/\text{m}^3$ 까지 끌어내릴 계획이다.

또 상수도 보급률은 87.8%에서 91%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43.1%에서 49%로 높일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 1일 법정부적 차원의 5개년

“

금七斗 산업자원부차관은 지난 6월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현대오일뱅크(주) 대표 서영태사장 등 30개 기업 대표와 에너지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2003년도 에너지절약「자발적협약」(VA: Voluntary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

환경계획인 제3차 환경보전중기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2007년까지 16조8천억원을 투입해 환경수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18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협조·추진 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분야별로는 상하수도 관리에 8조2천727억원, 대기 관리에 2조5천52억원, 폐기물관리에 2조2천865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환경부는 ▲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강화 ▲ 개발·보전의 조화 ▲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 민·관·국제 협력관계 증진을 4대 추진전략으로 정하고 171개 투자사업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 ■ 원주지방환경청 주관 동강유역 환경오염행위 특별 합동단속 실시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노부호)은 휴가철인 성수기를 맞이하여 동강유역을 찾는 래프팅 탐방객에 의한 자연생태계 훼손 등 환경오염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강원도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등 관계기관 및 주민감시원(60명)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각종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 2003년도 에너지절약 「자발적협약」체결

金七斗 산업자원부차관은 지난 6월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현대오일뱅크(주) 대표 서영태사장 등 30개 기업 대표와 에너지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2003년도 에너지절약 「자발적협약」(VA: Voluntary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금번 협약을 체결한 30개 업체는 2003년부터 5년간 총 877억원을 투자하여 투자완료후 매년 자체 에너지사용량의 약 7%인 250천 석유환산톤(toe)의 에너지를 절약(절감액 451억

원/년)할 계획이다.

이로써 '98년 포항제철(주) 등 15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총 565개 사업장이 자발적협약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5년간 총 3조895억원을 투자하여 투자완료후 연간 1조617억원의 에너지를 절약할 예정이다.

## 노조가 환경법 위반으로 회사 고발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업체인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주)범우 노조가 쟁의 행위를 벌이면서 회사를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 지난 6월 24일 고발했다.

노조는 회사가 폐기물 매립량을 늘리기 위해 독을 불법으로 4.5m나 높였고 매립이 금지된 폐유와 용제, 폐페인트를 비롯해 각종 오니를 무단 매립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폐기물 매립후 마지막으로 흙을 덮는 과정에서 기준인 높이 1.2m에 훨씬 못미치는 10cm 정도밖에 복토를 하지 않고 복토가 끝난 매립장에 나무도 심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노조가 단체교섭 결렬을 빌미로 회사를 음해하고 있다”며 “폐기물은적법한 규정에 맞춰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 노조는 지난 2월 조합원 17명으로 노조를 설립했으며 올해 첫 임·단협에서 전임 2명을 포함한 노조 활동 보장, 수당 신설 등에 대한 회사측과의 대립으로 지난 6월 9일부터 쟁의 행위에 들어갔다.

## 수원지검, 환경오염사범 무더기 적발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원성준)는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경기도, 한강환경감시대 등과 합동으로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84건을 적발, 이모(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남모(36)씨 등 1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2001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용인시 원삼면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업체인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주)범우 노조가 쟁의행위를 벌이면서 회사를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 지난 6월 24일 고발했다.



농지 3천678㎡를 불법전용, 도장시설을 설치한 뒤 대기오염 방지장비를 갖추지 않고 지난달 말까지 건설용 리프트를 제작, 도장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한 사범들의 유형으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24건, 수질환경보전법위반 7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 쓰레기 적게 버리는 주민에 혜택 준다

- 지역단위 종량제 내년 시행

기초자치단체나 아파트 주민들이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면 그만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지난 7월 6일 기초자치단체와 아파트단지의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 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단위 종량제'를 도입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단위 종량제는 쓰레기 종량제를 가정단위에서 지역단위로 확대한 개념으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초자치단체나 아파트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자치단체에는 광역매립지 반입비용을 인하해주고 청소예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시 군 구청의 담당부서와 아파트 부녀회에도 포상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예산 절감액의 10~30% 범위에서 포상하도록 연말까지 조례나 내부규정을 마련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폐기물 발생량 조사에 따르면 사무실이나 학교·상가 등에서는 1인당 하루 1.415kg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등 0.389kg인 가정보다 많으며 분리배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